

檢·警 수사권 조정 첨예 대립

■ 이달말 종료되는 국회 '사개특위' 남은 쟁점

법조일원화·압수수색 요건 강화도 진통 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지난 13일 대검 중수부 폐지 등 핵심 쟁점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법조 일원화,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현재 사개특위 내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의 복종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일반적인 경찰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준폐 문제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같은 법 2항(경찰의 수사보조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 개정 방향에 따라서는 현재의 검·경 수사권 체계를 유지하는 수준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허용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어 경찰과 경찰의 치열한 국회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사개특위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현실을 법으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검찰권 견제'에 적극적인 민주당이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개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갑자기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목표가 사라진 사개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율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개혁 사항으로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조일원화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13년에 3년 경력을 지닌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시작해 2022년이면 10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에게 법관에 임명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던 이 방안은 로스쿨 수료생을 '로-클러' (법원연구원)으로 뽑는 방안과 맞물려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로-클러'를 뽑아 경

력을 쌓게 하고 곧바로 판사로 임용할 경우, 우수 수료생들을 대부분 법원에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사개특위에 다양한 통로로 법조일원화 수정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대법관추천위원회 자문기관을 법제화하고 법관 평정 기준을 법령에 기재하는 방안은 법원에서 "법으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압수수색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방해' 라며 반발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사개특위 일정을 보면 전체회의만 3차례만 남은 상황"이라며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법조개혁안들은 핵심 쟁점에 비해 정치적 중량감은 떨어지지만 관계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신요금 더 내려라’

국회 방통위 압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 정책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추가 인하를 압박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정부의 인하안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낮다"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판매업체(MVNO) 허가가 필요한데, 기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가 MVNO로 참여할 경우 실현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라며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세금처럼 내는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대책에 대한 지적이 거셌다.

한나라당 허재희 의원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이 실시됐

으나 전체 373만명 중 24.7%만이 감

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절차 간

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0년 이후 중수부 수사중 5명 자살”

박영선 정책위원장…무죄 선고율도 평균 9%로 높아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원장은 14일 대검 중수부 수사 도중 자살 사례와 무죄 선고를 자료를 제시하며 "대검 중수부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사개특위 산하 검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후 중수부 수사 도중 자살 사례는 13일 숨진 채 발견된 임상규 순천대 총장을 비롯해 5건에 이르렀다. 임 총장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합법 비리'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부산저축은행 사전 인출'의

혹으로 지난 3일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2006년 5월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 ▲2011년 5월 금감원 부산지원 직원 김모씨 등이 중수부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다. 같은 기간 전국검찰청의 수사중 자살 사례는 12건이었다.

박 위원장은 또 "대검 중수부가 맡아 수사하면 사건의 무죄율은 9%로 평균 2~3%대인 통상적인 무죄율보다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내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 까지 중수부 수사의 무죄율은 평균 9%로 전체 검찰 수사 평균 무죄율(2~3%)을 웃돌았다. 3심을 기준으로 하면 2005년 22%, 2006년 50%, 2007년 25% 등이었다.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해 사개특위 활동은 6

월말로 끝났지만 개혁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 남은 과제

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쇄신파 '사법개혁' 무산 불만

한나라당 쇄신파에서 사법개혁 무

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재보선 참패 후 박차를 가했던 '쇄

신'에 천물을 기웠던다는 분위기다. 일

부에서는 "여당이 검찰과 청와대에 발

목 잡혔다"는 지적까지 하고 나섰다.

정두언 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

에 "사법개혁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다"며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한

편 7·4 전당대회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쪽은 검찰, 청와대, 검찰 출신들, 그리고 뭔가 깨립칙한 사람들"이라며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애초 합의가 외압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초된 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당 쇄신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도 이날 좌초된 사법개혁을 주제로 모

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여·야 지도부도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

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 출신들이

사개특위 안에 너무 많았던 만큼 사개

특위 기간을 연장한다면 구성원을 바

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값등록금 설전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과 한나라당 서상기 간사, 민주당 안민석 간사가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공청회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값등록금 속도조절’ MB 발언 논란

국회 교과위

우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반값 등록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반값 등록금 정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자꾸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에 이어 '반값 등록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라고 물어붙였으나 한나라당은 '야당이 대통령 발언을 오해한 채 등록금 대책을 변경하던데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토의하라는 게 취지 아니겠느냐'고 받아쳤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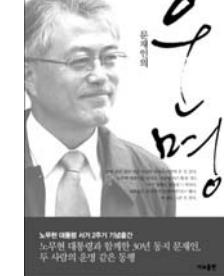
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기로 한 공청회 문제를 놓고도 광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어제 청와대에서 물어 반값 등록금 대책을 전 천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여야 협의체 구성 운운하며 다른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여야 협의체 구성을 하자는 제안은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이미 대놓았던 것이어서 (정치적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씨, 노무현과 30년 동행 기록 책 출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친

구인' 문재

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참여정부

비서와 함께 지난 30년간 노 전 대

통령과 동행의 기록이 담긴 '문재

인의 운명'(교고출판 간)을 출판

했다.

책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2003년 고문이었던 문재

인의 아버지 김만복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6년 11월 이후였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었

던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와 차별

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생각도 기록됐다. 문

이사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분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는 안타까워했다"며 "대통령으로

는 매우 큰 배신감을 느껴 상처가 더 깊었다. 특히 대통령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정동

영 전 의장(현 최고위원)의 행보는 그분을 너무 아프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상황과 관련, "이 인구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견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하고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대검 중수부의 수사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

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균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

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선후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복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류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선후방하면 1~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복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선후방 하시면